

33개 지방언론사 편집국장단 오찬간담회

- 정부와 언론의 새로운 관계 -

“언론, 국민들에게 잘 못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반갑다. 검사검사해서 우리 국무회의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들께 기사로서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인데 실제로 항상 그렇게 기사가 있지는 않다. 또 항상 마음으로는 좋은 기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정이야 그렇지만 제 욕심으로는 좋은 기사 드리는 것보다는 만나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 좀 해 보자, 그런 것이 더 크다.

그동안 국정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내 생각하고 다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또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또 의미 이런 것도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어려움이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은 또한 언론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비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는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다 아는 것 같아도 취재를 하면 모든 것이 취재가 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모든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뤄진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실제로 다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입지나 환경이랄까 또는 어떤 주관적인 관계에 의해서 의도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일부 중앙언론과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내내 관계가 좋지를 못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언론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저를 대통령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부 언론이 있어서 그 또한 이제 우리 생각이 국민들한테 바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세 번째 것은 제가 이제 좀 악의적인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길게 말하는 것은 좋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지역언론하고 한번 그런 구조를 대입해 보면 역시 지역언론에도 그런 점이 있다. 이 문제는 저와 개인적인 어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이해관계랄지 지역적 관점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좀 사시로 비치게 돼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요인 때문에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우리 정책수행에 굉장히 어려움으로 닥쳐온다.

“참여정부와 언론은 협력이 아닌 갈등 관계”

사실 정책을 입안하고 머리를 짜내고 자원을 동원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려고 동의를 구해내는 것,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 이해집단의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발을 합리적으로 통제할지 조정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또 이것은 제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내가 참여정부 출발하면서 기존의 전 정부 또는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 크게 보면 정치와 언론 이리는데 대개 정치권력과 언론이라고 봐야겠는데 그 관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운영돼 왔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보자, 고칠 것은 좀 고쳐보자, 이렇게 해서 좀 버겁게 또 일을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초반부에 언론과의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었다.

지역언론 여러분들하고는 직접 그렇게 많이 충돌한 일은 없지만 역시 언론은 언론이니까 비슷한 사고구조 속에 충돌되는 부분이 실제로 있다. 내가 지역언론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언론이 어찌고 이러면 모든 언론이 다 섭섭한 것이다. 가령 어떤 문제에서 제 머릿속에서는 한두 개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도 모든 언론이 그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고 해서 참여정부와 언론은 그동안에 협력관계라기보다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가가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대로 하자면 그런 갈등관계는 좀 풀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권력수단이 있었다.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떻게든 간에 심지어는 보도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그 국가의 힘은 우리 한국에서는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현저히 변화하고 있고 서구 선진국에서도 국가권력의 행사하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다.

“정부와 언론, 창조적인 대안 경쟁해야”

그래서 OECD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거버넌스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리더십’ 이런 주제로 책을 써낸 것을 보면 이제 일방적 통제의 시

대가 아니라 다원화된 사회, 권력이 다원화된 사회,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일방적 통제로서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국가적 목표를 통합하고 국가적 역량을 같이 동원해서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연구되고 그런 것 같다.

그런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역시 시민사회와 언론, 그리고 정부 이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학계가 또 그 사이 지식사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대개 정계, 학계, 언론계 또 시민사회 뭐 이렇게 분류해서 말할 수도 있겠다. 아주 중요하다. 물론 경제계도 역시 거기에 같이 참여해 있는데 그 사이에서 특히 정부권력과 언론 사이에 대화는 좀 부드러워야 된다.

비판과 견제가 그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지만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과거처럼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줄어들면 드는 만큼 언론의 기능도 상대적으로 할 일이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거대 권력의 횡포가 없는데 언론이 쓸 수 있는 것은 자꾸자꾸만 주제가 작아진다. 작은 데로 세밀한 데로 지역적인 부분으로 자꾸 기사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국가적 지도력이 점차 취약해져 가는 상태, 국가적 지도력이 흔들리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지도력의 위기시대라고 할까. 취약성이 자꾸 노정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언론이 자기 역할을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 민주주의 성립기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인권보호라든지 권력을 견제하는 그 역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사회 창조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 사회 토론의 어떤 의제관리, 사회 전

체적인 의제관리를 보다 더 합리화하고 전 사회적인 토론문화의 수준을 좀 더 끌어올리고 그래서 관료조직과 언론 사이에서 또는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서 어쨌든 보다 더 창조적인 대안으로 경쟁하는 이런 어떤 지적인 관계를 새롭게 한번 형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제가 첫 인사를 드린다는 것이 오늘 좀 얘기를 길게 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시간 뒤에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모시고 이런 우리 시대에 관한 인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제일 좀 큰 뜻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로서는 결국 언론과의 관계에서 과거와 같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는 이제 한 단계를 넘어선 것 같으니까 좀 새롭게 합리적인 관계를 설정해 보고자 하는 집권 하반기에 그런 계획들을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크게 말하면 창조적인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경쟁적인 협력관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개 그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떤 생산적인 경쟁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비서실장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해서 좀 쉬고 싶다는 의사도 표현했지만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때에는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런 목표를 좀 고려해서 새로운 비서실장을 선임할 생각이다. 그렇게 하고 시작 하죠. 감사하다.